

#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tegration of Happiness*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고 OECD 사회통합 요소들에 근거하여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변수를 도출하고 이러한 변수들과 행복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통합의 대부분 요소들이 개인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산수준이 열악하고, 실업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사회의 하위계층(underclass), 사회를 전반적으로 불신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딱히 도움을 청할 만한 지인을 떠올리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생활수준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향후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행복의 수준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이중구조화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포용도를 높이려는 노력, 민주주의를 고도화시키고 사회적 신뢰와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탄탄히 하려는 노력, 미래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을 줄이고 사회이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과 정책들은 전반적인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유효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최근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질문이 학문 세계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기존 통계에 불만을 토로하며, 스티글리츠, 셴, 피투오치를 필두로 한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에 관한 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MEPSP)를 구성하였다<sup>1)</sup>. 총 25명의 세계적 석학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총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성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온 근대 ‘이성’의 시대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2009년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OECD는 “보다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BLI)를 선정하여 회원국들의

1)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and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www.stiglitz-sen-fitoussi.fr](http://www.stiglitz-sen-fitoussi.fr).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다. 건강상태, 주관적 안녕,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일자리와 근로소득, 교육과 기술, 환경의 질, 주거, 소득과 자산,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관계, 개인적 안전의 11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보다 나은 삶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36개 대상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OECD 2013, p.40)<sup>2)</sup>.

특히, '전반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0~10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1980년 평균 5.34에서 1990년 6.69로 점수가 크게 상승하였지만, 2001년 6.21, 2005년에는 6.35로 오히려 1990년에 비해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worldatabaseofhappiness. ur.nl). 이러한 결과는 이스털린이 1974년 제시한 가설, 즉 "주어진 시점에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과 행복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국가의 부(富)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더라도 행복의 전체 수준은 증가하지 않는다"<sup>3)</sup>는 '이스털린 역설'의 전형적 예로서 주목된다.

왜 전체로서의 국부는 증가하였는데 비해 개인들의 행복의 총량은 이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은 것일까? 이스털린 역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력한 설명이 존재한다. 하나는 소득의 상승은 처음에는 추가적인 쾌락을 제공하지만 이는 대체로 일시적일 뿐 지속되지 않는다는 소위 '적응'(adaptation) 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중요한 것은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 위치라는

소위 '상대소득' 효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안정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사회적 자본), 제도에 대한 신뢰 등 사회통합적 요소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회통합적 요소들과 개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국민행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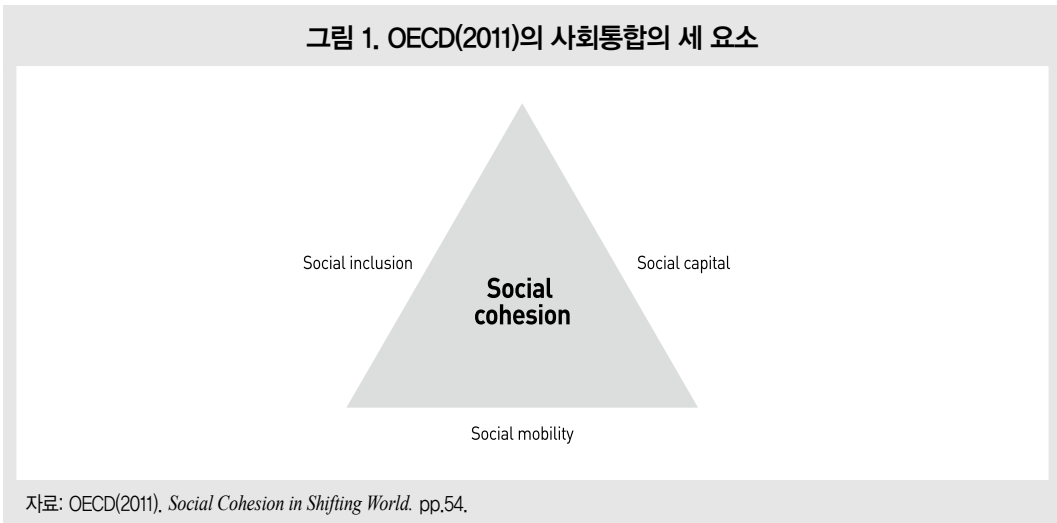
## 2.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사회통합은 뒤르켐(David Emile Durkhem, 1858~1917)이 그의 저작『사회분업론』(1893)과『자살론』(1897)에서 중심적 주제로 제기한 이래 사회과학의 중심적 테마 중 하나였다. 산업화 초기의 사회적 아노미를 배경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황금기 동안 상대적으로 논의는 쇠퇴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사회통합의 문제는 사회과학의 전면에 '재등장'했는데, 이는 지구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재등장, 기술과 조직의 복잡성 증가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증가, 양극화의 양상 등 탈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아노미를 그 배경으로 하고

2) 상위권에는 호주,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속해 있으며, 한국의 후순위에는 포르투갈, 헝가리, 그리스, 스페인, 러시아, 브라질, 칠레, 멕시코, 터키 등의 위치해 있음.

3) Easterlin, R. A.(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R. A. Dvaid & M. W. Reder(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그림 1.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



자료: OECD(2011), *Social Cohesion in Shifting World*. pp.54.

있다<sup>4)</sup>.

관련한 논의로, 최근 OECD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의 세 축을 사회통합의 요소로 보았다. 사회적 포용은 빈곤,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배제의 측면으로, 사회적 자본은(개인적, 사회적) 신뢰와 다양한 형태의 공공 참여(civic engagement)로, 사회적 이동은 사회 내에서 지위를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측정될 수 있으며, 이 세 요소들이 제도적으로 잘 보장된 사회일수록 통합도가 높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OECD 사회통합의 요소에 기초하여, 계측가능한 사회통합 변수를 도출하고,

이러한 사회통합 변수와 행복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sup>5)</sup>.

### 1) 사회적 배제와 행복<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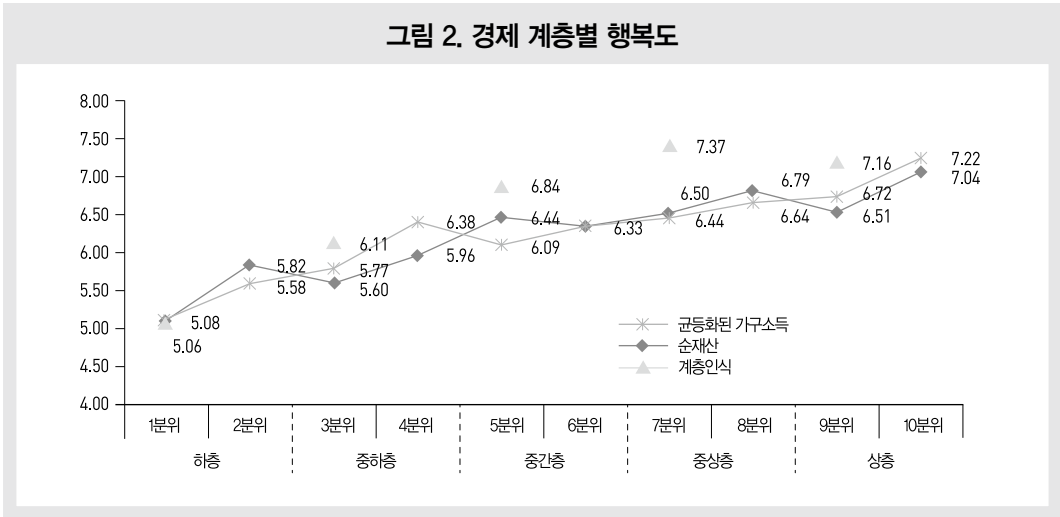
먼저, 사회적 포용은 소득과 자산의 상대적 위치(분위), 계층의식, 그리고 종사상 지위를 대리변수로 측정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가구소득과 순재산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을 중간층 혹은 중상층으로 인식할수록 행복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10%, 재산 하위 10%, 그리고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중간계층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1점 이상, 상위

4) Gough, Ian, and Gunnar Olofsson(1999). *Capitalism and Social Cohesion: Essays on Exclusion and Integration*, MacMillan Press. pp.3.

5) 여기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에 조사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임. 본 조사는 2014년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완료 응답자 수는 3,648명임.

6) 행복 변수는 “\_\_님께서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가”라는 질문에 대해 0~10점까지의 서열척도로 계측되었음. 이 변수 대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해도 각 집단별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음.

그림 2. 경제 계층별 행복도



계층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2점 이상 행복도가 낮았다.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경제적 열위 계층, 즉 사회적 배제집단의 행복 수준은 5점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경제적 지위와 정규직 여부별 행복도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되는 상용직과 정규직의 평균적인 행복도는 각각 6.62와 6.7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해당하는 임시일용직의 행복도는 5.68, 비정규직의 행복도는 5.75로 상용직과 정규직에 비해 1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실업자의 행복

그림 3. 경제활동상태별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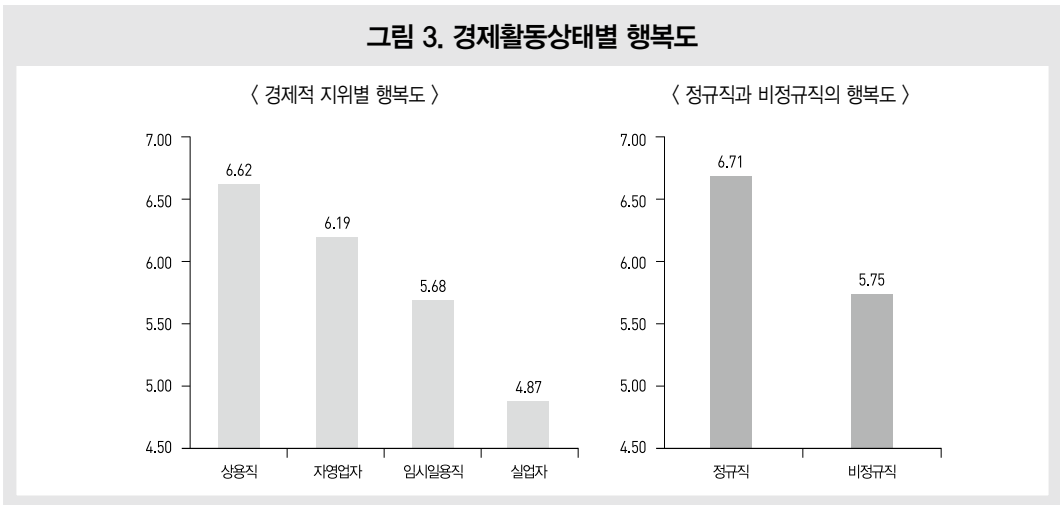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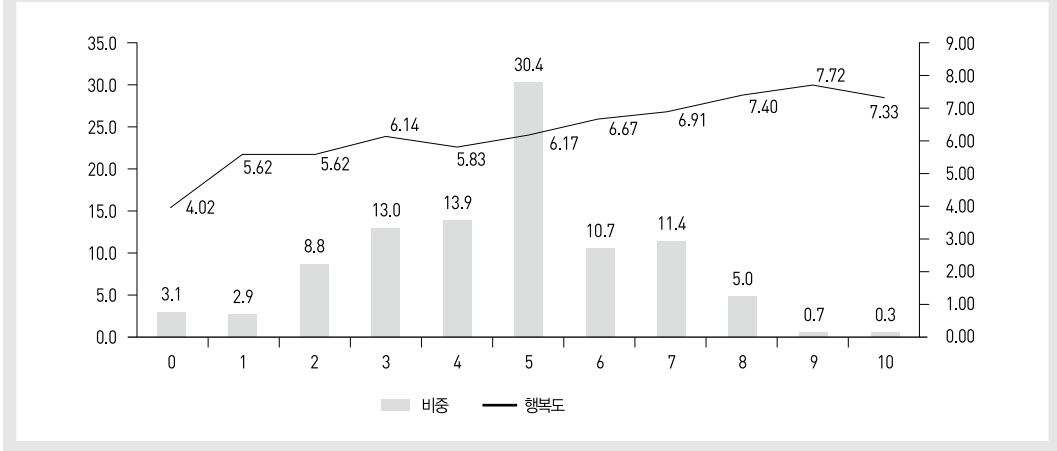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에 대한 신뢰도의 분포와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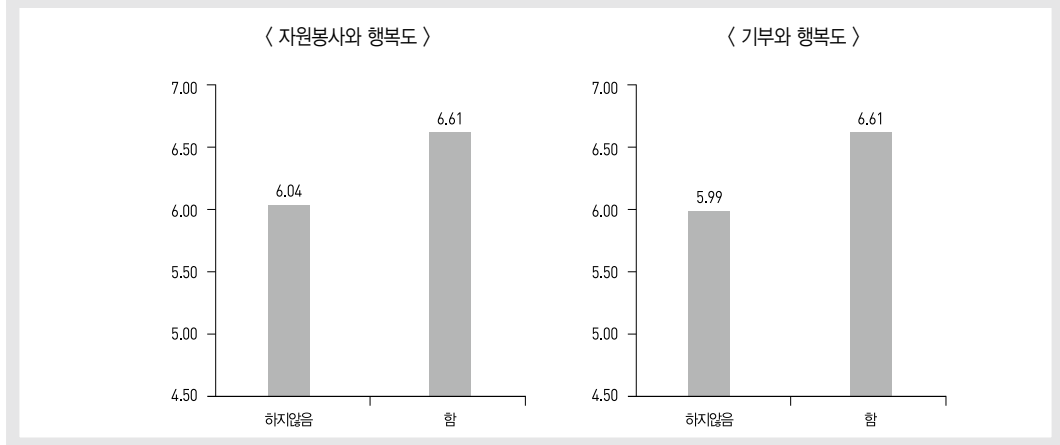
도 점수는 4.87로 모든 비교 대상 집단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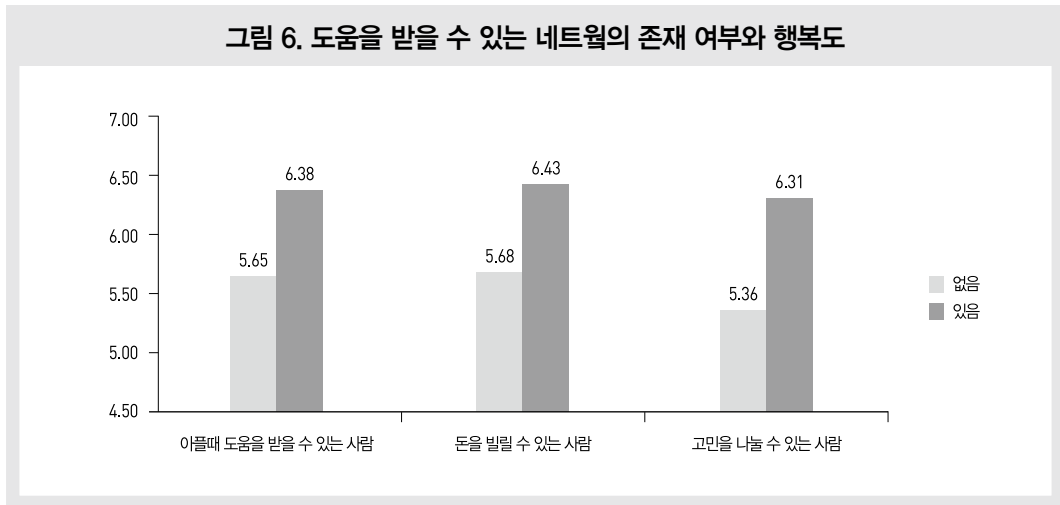
## 2) 사회적 자본과 행복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

뢰도, 자원봉사와 기부의 경험 여부, 그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존재여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계측되었다. 먼저, 0~10점 척도로 측정된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도의 평균은 4.59로 정규분포 형태의 신뢰도 분포를 보인다. 또한 대체로 사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행복도

그림 5. 자원봉사 및 기부와 행복도





또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0점)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10점)의 행복도는 각각 4.02와 7.33으로 3점 이상의 점수 차를 보였다.

해외 사례들과 유사하게, 자원봉사와 기부 또한 개인의 행복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와 기부를 하고 있는 집단의 평균적인 행복도는 6.61로,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0.6점 정도 더 높은 행복도를 보여주고 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는 실질적인 사회적 자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위 그림에서는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이를 할 수 있는 친척, 직장동료, 친구, 이웃 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과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세 부분 모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집단의 행복도는 6.31~6.43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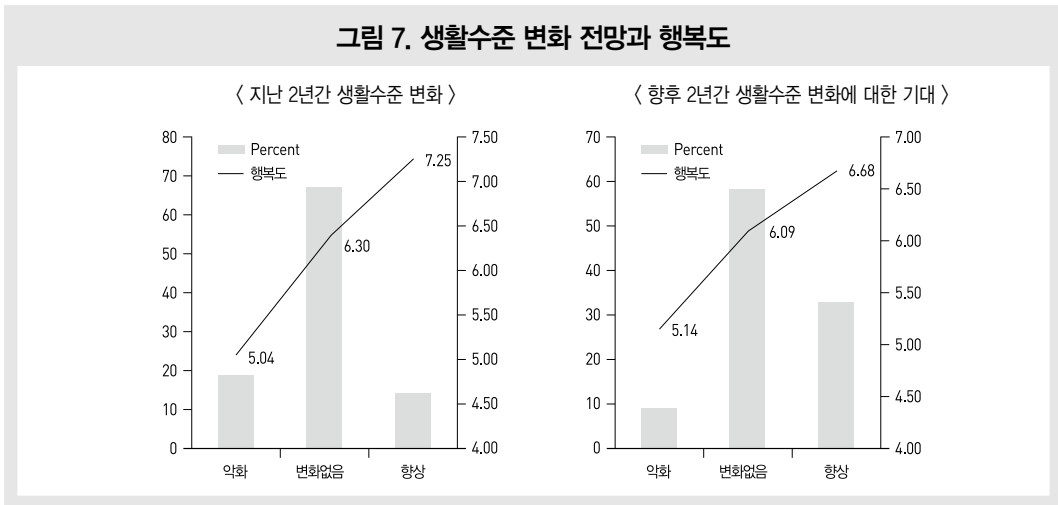
로,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행복도 5.36~5.68보다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

### 3) 사회이동 전망과 행복

사회이동은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 이동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계층이동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지난 2년간의 생활수준 변화와 향후 2년간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기대라는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변화 전망을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년간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4.17%이며, 앞으로 2년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2.79%였다. 과거 생활수준 변화와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적인 행복도는 7.25로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집단의 5.04보다 2점 이상 높았다. 향후 2년간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집단의

그림 7. 생활수준 변화 전망과 행복도



행복도는 6.68로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행복도 5.14보다 1.5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 3. 나가며

단순히 소득의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기대소득과 실제소득 간의 격차, 미래의 안정 전망, 사회와 이웃에 대한 신뢰, 참여, 낮은 부패 수준, 민주주의와 법치의 실현 수준과 같은 사회통합적 요소들이 시민의 행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Helliwell(2003)은 약 50개국의 행복도를 비교해서, 변량의 약 80%가 정부 신뢰의 질과 부패 등 6개 변수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의 정기적인 정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여섯 개

차원의 거버넌스(민주적 소통, 효과성, 규제, 법치, 안정성, 부패의 통제를 포함한다)에서 최상을 달성한 나라들이 안녕의 측면에서도 역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sup>7)</sup>.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OECD 사회통합 요소들에 근거하여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변수를 도출하고 이러한 변수들과 행복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통합의 대부분 요소들이 개인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에서 중상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스스로를 중산층 이상으로 규정짓는 사람들, 사회를 전반적으로 신뢰하고,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만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왔고 앞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

7) Mulgan, Geoff, "Well-being and Public Policy". in David, Suan A, Ilona Boniwell, and Amanda Conley Ayers(2013),(eds). *The Oxford Handbook of Happ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재인용.

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스스로를 더 행복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산수준이 열악하고, 실업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사회의 하위계층(underclass), 사회를 전반적으로 불신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딱히 도움을 청할 만한 지인을 떠올리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생활수준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향후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행복의 수준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히 낮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적 배제집단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집단이 많아질수록, 사회 이동이 정체될수록 그 사회의 평균적인 행복의 수준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행복도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전후 오히려 떨어진 것은,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절대적인 경제적인 수준은 증가하였지만, 삶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격차 역시 더불어 확대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쟁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통사회의 공동체는 붕괴되었지

만 이를 대체해 줄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한 현실에서 삶의 질과 행복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문조·박형준(2012)이 “성장기 한국 사회는 상층과 중산층을 망라한 다수의 ‘열망계급(aspiration class)’과 거둬들인 실패로 의기소침한 극소수 ‘낙망계급(disappointment class)’으로 구분되었다면,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의식적 계층구조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을 독점한 소수의 ‘야망계급(ambitious class)’과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상시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다수의 ‘절망계급(despairing class)’으로 분할되는 단절적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sup>8)</sup>”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역으로 보자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과 이종구조화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포용도를 높이려는 노력, 민주주의를 고도화시키고 사회적 신뢰와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탄탄히 하려는 노력, 미래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을 줄이고 사회이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과 정책들은 전반적인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유효할 것이 분명하다. ■

8) 김문조·박형준(2012).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한 한국인”, 사회와 이론 통권 제21-2집, pp.611-643.